



언론노동운동 10년, 평가 전망

손석춘

한겨레신문노동조합 조합원

1. 들어가면서

다소 '순진'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다. 필자는 늘 왜 우리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언론으로부터 그처럼 외면 받고 배신당하면서도 언제나 언론에 기대어 있는가 궁금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편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단숨에 깨우쳐 준 '사건'이 있었다.

1998년 7월20일, 명동성당.

민주노총 소속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아침 회의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다. 한 위원장이 목에 힘줄을 불긋불긋 돌구며 말을 꺼냈다.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 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 때문에 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을 때였다.

"기자 놈들, 똑바로 쓰라고 해. 제대로 쓰지도 않고 말야. 무슨 인터뷰를 한

다는 거야. ×××들! 죄다 모가지를 확 비틀어 벼릴까 부다."

투쟁으로 달궈진 그의 눈빛엔 핏발이 서 있었다. 당시 언론노련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필자는 순간 눈길을 보낼 때가 없었다. 부끄러움으로 딴전을 피웠으나 고백하거나 참으로 고마웠다. 눈시울을 적시는 물기를 가까스로 숨겼다. 언론에 대한 노동계급의 살아있는 분노를 확인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두루 알다시피 언론노동운동은 한국 노동계급의 존재를 국내는 물론이거나 와 전 세계에 알린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의 산물이다. 당시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분출된 노동자대투쟁은 언론과 관련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6월항쟁으로 언론자유의 공간이 객관적으로 넓어졌음에도 모든 신문과 방송이 노동자대투쟁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반노동자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언론의 편파성이 정치적 예속 탓이라고 믿었던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언론문제의 구조적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는 노동자투쟁을 계기로 언론인들 또한 언론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눈 뜨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7년 10월 『한국일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각 언론사마다 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창립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1988년 11월26일 전국의 41개 신문사와 방송사 노동조합들이 모여 언론노련을 결성했다. 당시 언론노련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높았다. 1980년대에 노골적으로 폐해가 드러났던 제도언론에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분노를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언론노련 결성 10돌이 지난 오늘의 언론상황은 초기 언론노동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얼마나 환상적이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언론계 안팎에서 한국언론노동운동에 대한 비판론은 물론 무용론(無用論)과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노동운동은 기자나 프로듀서들에게 일종의 '자위행위'라는 신랄한 비아

냥까지 떠돌고 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언론노련 10년사(1988~1998)를 되돌아볼 때 그런 자조와 비아냥이 반드시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염연한 현실 아닌가.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운동에 대한 과도한 자기비하는 운동에 백해무익이다. 언론노련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반성과 언론노련이 필요없다는 허무주의적 분석은 분명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운동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부정적 현상으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전개된 언론노동운동의 공과를 꼼꼼히 따져 언론노련의 재건을 준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언론노동운동 10년

언론노련의 10년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진다. 1988년 언론노련 결성이후 1991년까지는 언론노동운동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열망이 대단히 높았던 열정의 시기였다. 이어 1991년 이후 1997년 말까지를 '제도화 시기'라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에 들어선 1997년 말이후에 언론노동운동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① 언론노련의 출범과 초기의 활성화

초창기 언론노동운동이 언론민주화

에 대한 일정이 얼마나 높았던가는 언론노련의 창립선언문(1988)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땅의 언론은 제3공화국 아래 이십 수년간 예속과 굴종의 길을 걸어왔다”거나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 최초의 언론노동운동의 단초가 우리들의 자발적 노력보다는 외부의 도움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는 뉘우침이 그 증거이다. 그 부끄럼 위에서 선언문은 새로운 다짐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즐기찬 투쟁을 통해 보도 및 논평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 할 것”과 “이 땅의 노동형 제들과 굳게 연대” 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언론노련은 “우리는 우리들에 앞서서 악에 가득찬 정치상황 속에서도 선구적이고도 희생적인 노동운동으로 시대의 앞날을 열어 나갔던 여타 산업부문의 선배노동자들에게 겸손하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뜨거운 연대감으로 그들과 결속할 것을 다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뿐만인가. “우리는 전세 언론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자본가의 일방적인 이윤의 논리를 깨뜨리고 노동의 윤리와 노동의 논리가 이윤의 논리를 포용하

는 새로운 노동문화와 가치를 창조해 날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다. 참으로 ‘거창한 공약’이었다.

② 언론노동운동의 성장기

(1989년~1995년)

물론 창립 초기 파업이 잇따르는 등

언론노련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반성과 언론노련이 필요없다는 하무주의적 분석은 분명 구분 해야 하며, 후자는 운동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부정적 현상으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언론노련 출범 직전 「부산일보」 파업을 비롯해 1989년 3월에는 「평화신문」이 145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이어 「대전일보」가 22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9월에 들어서서는 MBC가 보도국장 직선제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해 편

성·보도·TV기술국장 3인 추천제를 쟁취했다. 「서울신문」과 「연합통신」에서도 광정보도와 편집권독립을 쟁점으로 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제주신문」의 경우 5공인을 청산을 내건 투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제민일보」가 창간되었다.

그러나 1990년 4월의 KBS파업을 정점으로 언론노동운동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KBS파업의 실패는 물론 당시 파업과정에서 언론노련의 충돌 결의가 선언적 수준에서 그친 사

실은 언론노동운동의 초창기 활력이 끊어가고 있는 뚜렷한 징후였다. KBS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한 노태우 정권은 방송 또한 사적 자본에 의한 간접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안을 1990년 6월에 마련했다. 사영방송의 허용이 그것이다. 방송노조들의 반발 속에 노정권이 통합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방송에도 사적 자본이 직접 침투하는 길이 열렸다.

신문의 경우는 사적 소유의 문제로 한층 불거지기 시작했다. 1989년 7월 『한국일보』가 휴일판을 발행하면서 단초가 열린 신문무한경쟁은 199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해 언론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드러난다. 더구나 『동아일보』에서 일어난 편집권 유린사태(91년 동아사태)는 신문노조가 얼마나 신문자본 앞에 무기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제도적 포섭경향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산별노조로의 조직강화 움직임과 『미디어오늘』의 창간 그리고 언론총파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주요 운동 또한 제도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모두 역부족이었다.

산별노조 움직임은 1995년 2월 KBS, MBC, CBS, EBS노조 대표들이 한국방송노동조합건설준비위원회(방노위)를 띄우면서 논의가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방노위는 출범 선언을 통

해 “상업방송이 출현한지 4년, 이로 인해 방송사 노조원들의 프로그램을 통한 민주언론 실천노력은 원천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방노위의 의욕적인 산별노조 건설 추진은 방향이 옳았음에도 산별노조 추진을 선언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제도의 벽을 깨어 나가기엔 아직 방송노조의 내부역량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이 언론노동운동의 획득가 되었다는 점에서 방송노조들의 선구적 노력은 충분히 평가해야 마땅하다.

『미디어오늘』은 국민과 더불어 언론을 감시해나가는 취지 아래 언론노련이 기존의 기관지 『언론노보』를 일반인들이 구입해 읽을 수 있는 주간지로 전환해 1995년 5월 17일 창간했다. 창간 초기의 신선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문제는 『미디어오늘』이 창간 전 목표했던 정기독자 수에 크게 못미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언론운동을 견인해나가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③ 노동법 총파업

이 시기 가장 뚜렷한 성과로서는 1997년 초 벌어진 ‘언론총파업’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지난 한계 또한 너무나 분명해 과연 그것이 언론총파업이란 규정에 값할만한 것이었는가

를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과대평가 또한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연말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전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1997년 1월 16일 이후 어진 '언론총파업'은 한국언론노동운동 동사에 남을 사태임에 분명하나 그 과정은 총파업이라 단정하기엔 적잖은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방송노동조합의 경우 1월 7일부터 총파업에 가담하는 조직력을 보였으나 방송 내용 자체가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문노조의 파업 참가는 일러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신문의 경우 1월 16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시한부 파업만을 벌였을 뿐이다. 그마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불참했다.

형식적이나마 1월 16일 언론총파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았다. 총파업을 벌었음에도 정작 언론노동자들의 현장인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은 반노동자적 논조로 일관했던 것이다. 언론노동조합 출범 초기에 언론노조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약

속했던 민주언론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총파업조차 제도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제도에 머문 언론노조의 문제점은 그해 연말 IMF상황을 맞아 극명하게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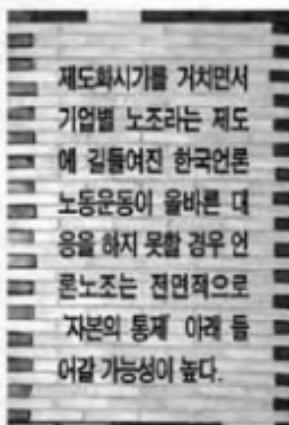
1997년 말 한국사회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언론노동조합운동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제도화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별 노조라는 제도에 길들여진 한국언론노동운동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언론노조는 전면적으로 '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고의 격감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신문 노동조합의 경우 철저

히 자본의 논리에 예속될 위기를 맞고 있다.

④ IMF 관리체제

언론노동운동이 지난 10년동안 벌여온 일들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언론노련이 초기에 스스로 자임했던 과제에 비추어볼 때 그 성과는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언론노동자들이 몸담고 있는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민주노



동운동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초기의 다짐과 외부의 기대는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언론노동운동의 성과로 제도언론 내에서의 민주언론운동의 합법적 공간 확보, 편집권 독립 등 언론민주화투쟁, 임금인상을 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과조차 곧바로 언론운동의 부정적 측면으로 이어진다. 제도언론 안에서 합법 공간 확보는 그대로 민주언론운동의 제도화로 귀결되었다. 보도감시 활동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편집권 독립도 대니수 노조에서 행해화한 형편이다. 게다가 언론노동조합들이 일상활동에 소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노조간부들의 관료화 현상도 무시 못할 부정적 요인으로 자라나고 있다.

특히 IMF 관리체제라는 공간에서 부정적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해고를 면한 경우와 하더라도 임금삭감이 거의 전 언론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결국 언론노동운동은 현재 전면적으로 '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여부에 봉착해 있다. 전환기답게 위기와 재편성기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위기인 까닭은 제도화 과정에서 운동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한

언론노조가 IMF라는 혹독한 상황을 맞았다는 점에 있다. 그것이 재편성기인 까닭은 바로 똑같은 이유에서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질 객관적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IMF상황은 언론노조에게도 시련이지만 자본과 권력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위기임에 분명하다. 언론노조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는데 한계에 부딪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균열을 언론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언론노동운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언론노동운동의 발전을 세약해온 구조적 질곡을 깨나가는 작업이 내부의 조직강화 작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론노동운동의 당면과제는 언론노련의 산별진회와 언론개혁 입법화 그리고 언론노동자의 정체성 확립으로 간추릴 수 있다.

3. 언론노동운동의 과제: 산별노조 건설과 언론개혁

언론노련 재건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산별노조로의 조직적 전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무모하달 만큼 짧은 기간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겠다는 방노련의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95년 5월을 목표로 한 단일노조 건설이 1998년 10월 오늘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방송단일노조 건설이 밖에 부딪치자 언론노련은 1997년 말부터 방송단일노조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언론 산별노조로 가겠다는 내부결정을 내렸다. 이 또한 1998년 상반기까지 언론산별노조를 출범시키겠다는 무모한 계획이었다. 계다가 1998년 5월 언론노련 이행모 위원장은 임기 중에 위원장직 사표를 내고 한국방송공사 부사장으로 자리 를 옮겼다. 산별노조 건설이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새삼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조대표들끼리 모여 산별노조를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해서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을 소수 간부들 중심으로 추진하는 엘리트주의적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안될 때는 되레 조합원대중을 비난하는 운동형태로는 산별이라는 지난한 과제에 단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언론노련의 사업작풍이 그러했다.

언론산별노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 언론사에 산별노조를 선전하고 조직화해낼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조직화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서 아무리 산별노조 결성 목표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해서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 노선과 사업작풍의 근본적 재검토가 선 행되지 않는 한 언론노련의 산별노조 건설은 요원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조합원 대중들과 더불어 산별노조로

조직 강화를 해나갈 때 평생해야 할 운동이 있다. 독점적 소유구조 아래 봉건식 왕권을 취두르고 있는 신문자본의 독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신문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산별노조로의 조직강화 운동과 아울러 언론개혁을 법제화하는 운동

이 절실한 것이다.

법제화는 언론노동조합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질곡을 깨뜨리는 과제인 동시에 언론노동운동의 목표인 민주언론을 구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송법을 고리로 방송사 노조들의 산별노조 건설작업이 추진되었듯이 신문 또한 정간법 개정운동을 고리로 언대를 조직화해내야 한다. 정간법 개정운동은 결국 언론개혁을 법제화함으로써 언론노동운동의 발전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개정 과정에서도 두 가지 과제는 유기적으로

■ 산별노조 건설을 소수 간부들 중심으로 추진하는 엘리트주의적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안될 때는 되레 조합원 대중을 비난하는 운동 형태로는 산별이라는 지난한 과제에 단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

결합할 필요가 있다. 정간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가면서 신문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기업별 체제를 산별노조로 추동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개혁 입법운동을 위해서는 언론노동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내부의 언론노동운동과 언론외부의 수용자운동이 결합해 언론개혁연대기구를 조직해 내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1998년 8월에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언론노동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구이다. 언개연은 민주노총은 물론 참여연대와 경실련 그리고 한국노총까지 가입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결합한 강력한 연대의 틀을 구성했다. 언개연을 통해 민주노총이 분노의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언론개혁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의 조직적 관심은 언론내부의 언론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끓어버린 정체성을 깨닫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노련의 조직 강화와 언론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그 주체인 언론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실 언론노련 창립 10돌이 지났지만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은 여전히 빈약하다. 특히 기자나 프로듀서들의 경우 언론노동자이기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뽀띠부르주아”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인의 계급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인’ 또한 언론자본에 고용되어있는 임금노동자임에 틀림없다면 기자나 프로듀서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회피이다.

언론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자임을 일깨우고 언론의 진정한 주권자인 사회구성원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갈 활동가들이 언론내부에 드문 상황에서 민주노동운동진영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히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운동 발전에 언론이 가장 큰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로서 언제나 자본가계급 쪽의 도구일 뿐이라며 언론을 배제하기란 비현실적일 뿐더러 운동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은 전교조의 교육현장과 더불어 민주노동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정당 운동의 중요한 ‘진지’ 인 까닭이다. ♦